

출산을 세계 최저

원인과 대책

낳고는 싶은데 키우기 힘들어서...

작년 출생아수 43만8천명 사상 최저
육아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 바뀌어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정부 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 기반의 붕괴를 걱정할 정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말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실태=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 1.16명에 비해 0.08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합

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하락폭으로 따지면 2001년 0.17명, 2002년 0.13명 등에 이어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큰 폭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해 전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1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른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5년 출생아수도 43만8천명에 불과하다. 2004년 47만6천명에 비해 3만8천명이나 감소했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2005년 출생아수는 무려 20만명이나 줄어 들었다. ◇원인=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높은 주택 구입 비용과 소득 부족, 실업과 고용불안 등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

회경제적 환경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 기피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혼 남성 85.9%, 미혼 여성의 81.8%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는 등 대다수 가정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녀있는 가구의 51.7%가 생활비 중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육아와 교육비 부담이 큰 데다 출산 전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직 여성 중 51.1%가 출산 후 직장이나 휴직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기혼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점도 출산을 꺼리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책=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내 소비 시장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세금 징수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 18개 부처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선거구 바꾸고 '체급' 바뀌서

지방선거 경선 탈락 후보들 선회 출마 속출
선거법 맹점 악용...급조 당원 무더기 탈당도

5·31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현행 선거법을 피해 '체급'이 다른 선거의 무소속 후보로 선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일 전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57조 2항)에는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선탈락 후보가 선거구를 달리 하거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상당수 탈락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내 한 지역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A후보는 경선탈락과 함께 광역의원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다른 지역 광역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B, C후보는 기초단체장 무소속 출마로 돌아섰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선거구만 바꿔 출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했던 현직 기초의원들이 경선에 탈락한 뒤 무소속 기초의원 선거로 유턴해 상대 후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고흥지역 기초의원 경선에 참여

한 5~6명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에 나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일부 탈락자가 급급제공 의혹 등을 제기,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전락지구로 선언했기 때문에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락자들의 반발을 감안, 무소속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확정된 김모(52)씨 등은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4명에 대해 '기초의원 출마자격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해 급조된 당원들이 경선 직후 탈락 후보자와 함께 무더기 탈락하는 등 현행 경선제도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각 정당 당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내 경선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명분으로 일부 경선탈락 후보들이 선거구를 달리해 무소속 출마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지,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중앙 왼쪽)이 8일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영택 광주시장 예비후보(중앙 오른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임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다. 임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정래혁씨 이후 두번째 국회의장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07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설명회 및 논술·면접 특강

- 행사내용
 - ▶ 2007학년도 1차 입학설명회
 - ▶ 2007학년도 2차 입학설명회
 - ▶ 2007학년도 3차 입학설명회
 - ▶ 입학설명회 및 특강
- 행사일정

시점	일시	장소
1차	2006년 5월 14일(토) 오후 2시	오산 1관 101호
2차	2006년 5월 21일(토) 오후 2시	4차 4관 101호
3차	2006년 5월 28일(토) 오후 2시	4차 4관 101호
4차	2006년 6월 4일(토) 오후 2시	4차 4관 101호
5차	2006년 6월 11일(토) 오후 2시	4차 4관 101호

문의: 한양대학교 입학처
Tel: 02-220-0079-0079
www.hanyang.ac.kr

한양대학교
www.hanyang.ac.kr

평택 미군기지터 철조망 훼손 시위대 처벌

민간인에 軍형법 적용 논란

평택 미군기지 터 진입을 저지하려던 장병을 폭행하고 철조망을 훼손한 시위대에게 군형법을 적용,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이 백주에 민간인에게 폭행당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형법으로도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민간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그것도 평시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 미군기지 터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와 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은 윤광복 국방장관의 언급으로 공론화됐다.

유 장관은 7일 시위대를 막다가 부

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을 위로 방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정래브리핑에서도 평택 미군기지 터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계획적인 정면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불법폭력 행사자에게 군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참석준비단장도 이날 KBS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군형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

했다. 군은 일단 철조망을 뚫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난입하는 민간인을 즉시 체포해 군형법에 의한 '군용시설물 손괴' 혐의로 처벌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군형법 적용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민간인 시위대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된 민간인을 군형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불난 곳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않다.

더구나 미군기지 터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법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연필뉴스

"박람회 유치 위해 정몽구회장 선처를"

김성곤·주승용의원 탄원서

지역구가 여수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주승용 의원이 8일 현대기아차 사태와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2010년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장)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정 회장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박람회 유치에 몰두하며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사법당국에서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는 실패했지만 인지도나 SOC 등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던 여수시가 모스크바 같은 세계적 대도시

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정 회장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고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은 정 회장이 다시 한번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 등은 또 "두번째 도전하는 세계박람회의 유치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여수시민과 광주·전남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탄원을 받아들여 주면 한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